

2025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5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사단법인 녹색연합" 계획서

■ 제1장 조직소개

● 조직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 우경선 상임대표 (법무법인 자연 대표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박그림 공동대표 (설악녹색연합 대표,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공동대표) ● 원 정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한가람문화재단 이사장) ● 윤정숙 공동대표 (60+기후행동 운영위원) ● 조현철 공동대표 (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교수, 비정규노동자센터 꿀잠 대표) ● 정규석 사무처장 (실무 총괄자로 상근하는 임원)			
설립년월일	1991. 6. 6 녹색연합 창립 2009.9.28 사단법인녹색연합 설립	상근직원 수	30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성북동)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모 법인명	해당없음
공익법인	Y	주무관청	환경부
조직의 설립목적			
녹색연합은 ‘생명존중, 생태순환사회, 비폭력평화, 녹색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생태, 생활, 환경갈등 현장에서 활동을 펼칩니다.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기후위기와 인간의 간섭으로 위협받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양과 제주 바다의 연산호, 유리창에 충돌하는 야생조류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고산침엽수 모니터링과 멸종위기종 지정을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활동	생태계와 우리 일상의 기후위기를 직면하고 그 심각성을 알립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변화를 요구하며 시민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탈핵과 탈석탄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합니다.
자원순환 활동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과 플라스틱 생산의 원천 감량을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감축 기준을 수립하여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생물다양성 #제도변화 #현장성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1. 공유지의 비극 : 환경수용성과 오염자부담원칙의 갈등

2021년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특별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방식에 합의했고, 국토교통부가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공론 조사였다. 지난한 토론과정 이후에 도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처음 제2공항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 쟁점이 적극 제기되면서 여론이 역전된 것이다. 환경적으로 사업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도 제주 제2공항 계획은 3차례의 보완을 거치고도 최종 ‘반려’되었다. 환경부는 반려 이유로 제2공항 건설시 법정 보호 야생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숨골 지형 훼손 등을 제시해 내용상 ‘부동의’였다. 제주의 독보적인 자연환경 가치를 두고 미래에 대한 모색과 숙고 끝에 내린 도민들의 민주적 결정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려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했고, 당시 거대 양당 대선 후보자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의 결정은 안중에도 없이 ‘제2공항 건설’과 ‘사업 검토’를 정치 표심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대한 훼손은 물론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해 놓고도 탄소흡수원을 밀어내고 대규모 탄소배출을 장려하는 모순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제주는 일찌감치 ‘에너지전환과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시행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탄소배출이 늘어나 한계에 부딪혔다. 연간 관광객이 1,500만 명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하고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력수요, 폐기물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해안부터 중산간 지역까지 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지하수 오염, 오폐수로 인한 연안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시설을 늘린다고 유한한 섬의 환경수용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생태계 감당 한도를 넘어선 과잉관광과 개발은 결국 제주도민과 다음 세대가 막대한 비용과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것이다.

오염자 부담원칙과 ‘공유지의 비극’이 연결된 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환경문제와 그 환경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양상에서 드러난다. 만약 서식지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이 야생동식물이 설 자리를 빼앗는 서식지 파괴 비용을 현재와 미래까지 계산해 사업자에게 온전히 부과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인류가 초래하는 생물다양성 위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로 계산되는 환경 비용과 부과 방법은 합당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익은 일부에게 편중되지만 비용은 미래세대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부담한다.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모든 환경 문제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법제도로 단단히 하고, 또 통용되는 상식으로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2. 깨진 유리창 효과 : 무력한 보호정책

‘그래도 되는 땅은 없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래도 되는’ 곳으로 무관심하게 훼손된 공간이나 ‘그래도 되는 것’으로 보잘것 없이 치부되는 존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개발 악몽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각 보호구역의 근거법들은 지정취지는 다르지만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강력히 제한하여 자연유산을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하고 계승하자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정치 손익 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논리는 보호 정책 보다 늘 앞섰고,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은 4차례나 사실상 정당한 절차 내에서 취소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조건부 동의하며 사업을 허가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유리창은 계속 깨져나갈 것이라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환경문제가 갈수록 파편화되고 다변화하는 양상이지만, 실제 그 유형은 과거부터 여전히 반복되는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거짓 조사, 부실 조사를 방치하고 아주 미미한 숨방망이 처벌이 일반화된 탓에 사업자가 하는 환경영향조사는 그 자체로 불신의 대상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증식하는 문제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탓에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막개발을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이젠 훼손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환경문제 중 이런 유형이라면 해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손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면 먼저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련 법률의 벌칙 조항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기준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사회적 약속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당장의 편리나 무관심이 환경적으로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잠재적 영향력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이고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변화의 오해

흐르는 강물을 두고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 행정, 지역주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미래세대 등 이해당사자는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도 중앙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유역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가져와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유역 거버넌스’가 현장에서 물의 주인이 마치 지역주민 또는 지역 거버넌스의 이해당사자들로 국한된다는 억측 또는 오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니면 끼어들지 말라는 식의 주장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의 태도는 강을 해당 지역의 자산으로만 이해하는 전형적인 언사다. 그러나 우리 강은 물관리기본법에도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듯이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공재다. 그러기에 녹색연합은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의 친구 365> 캠페인을 제안하여 4대강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물리적 거리가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둔갑해 정치와 행정의 논리로 활용되는 예는 강원도의 자산으

로 둔갑한 설악산국립공원, 제주도의 관광상품으로만 취급되는 천연보호구역 문섬 등 수도 록하다. 우리 자연이 특정 지역의 자산으로만 취급된다면 망가짐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 자연은 모두의 공공재로서 충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지역성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이해가 중요한 경우도 많다. 제 아무리 환경적으로 이롭고, 필 요한 시설일지라도 누가 수용성의 주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놓치지 말아야 한 다. 만약 발전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경우 이해당사자 주민은 수혜를 입는 도시민이어 야 하는가, 사업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공간의 지역민이어야 하는가. 콘센트만 꽂으면 편리 하게 쓸 수 있는 전기를 쓰려고 느닷없이 마을 한복판에 송전탑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역민 의 불편과 절규를 이해하고 에너지 정의를 고민하도록 돕는 것, 책임을 나누도록 요청하는 것! 이것이 도시에 있는 녹색연합의 역할이다.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현장에 기반한 객관적 데이터 수집으로 공론화

#활동가중심_현장운동 #현장의 소리로 문제제기

녹색연합 자연생태 활동가에게 일 년에 등산화 두켤레는 필수적인 조사 장비이다. DMZ 일 원의 민북지역, 향로봉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 설악산부터 경북 울진에 이르는 산양 서 식지, 그리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징후와 증거가 있는 곳에 달려가 기록하는 현장 활동 의 특징을 반영한다. 2022년 3월 경북 울진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들 어가 오랫동안 관계를 다져온 지역주민 지원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양 서식지 복원이 대책 에서 빠지지 않게 행정을 독려한 것도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이다.

녹색연합이 2023년에 창립한 해양전문기구,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활동가들은 모두 중 급이상의 자격을 갖춘 스쿠버다이버이다. 직접 공기통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기후변화 의 증거인 산호 백화현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천연기념물 연산호의 변화를 기록한다. 관광용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천연보호구역을 시나브로 파괴한 흔적을 언론에 알리고 주무부 처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더 큰 훼손을 막기 위해 국회, 문화재위원회 등 입법과 행정기관에 정책 개선을 요청한다.

이 밖에도 발전소, 재활용 수거장, 프랜차이즈 카페, 배달음식점 등의 현장의 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 안에서 해결의 단초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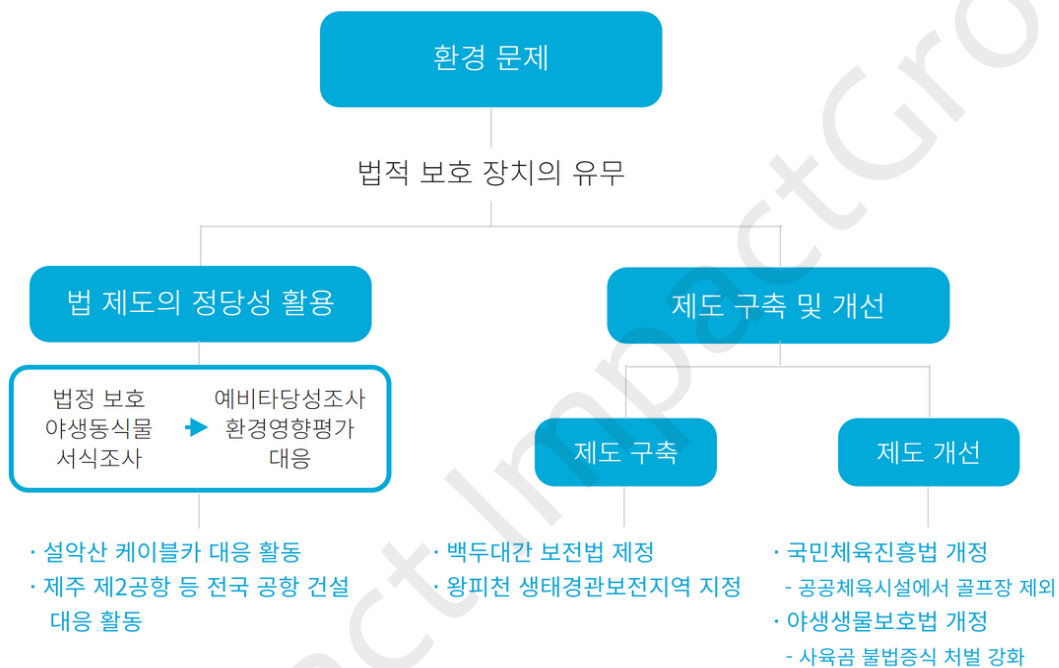
2. 항구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캠페인 설계

#정책대응 #제도개선 #지속성있는_보호장치마련

현장의 소리로 문제를 공론화하며 지속가능한 대안을 목표로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한다. 직 접적인 위협요인 제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호장치 마련으로 공간(서식지)과 존재(야생동 식물, 지역주민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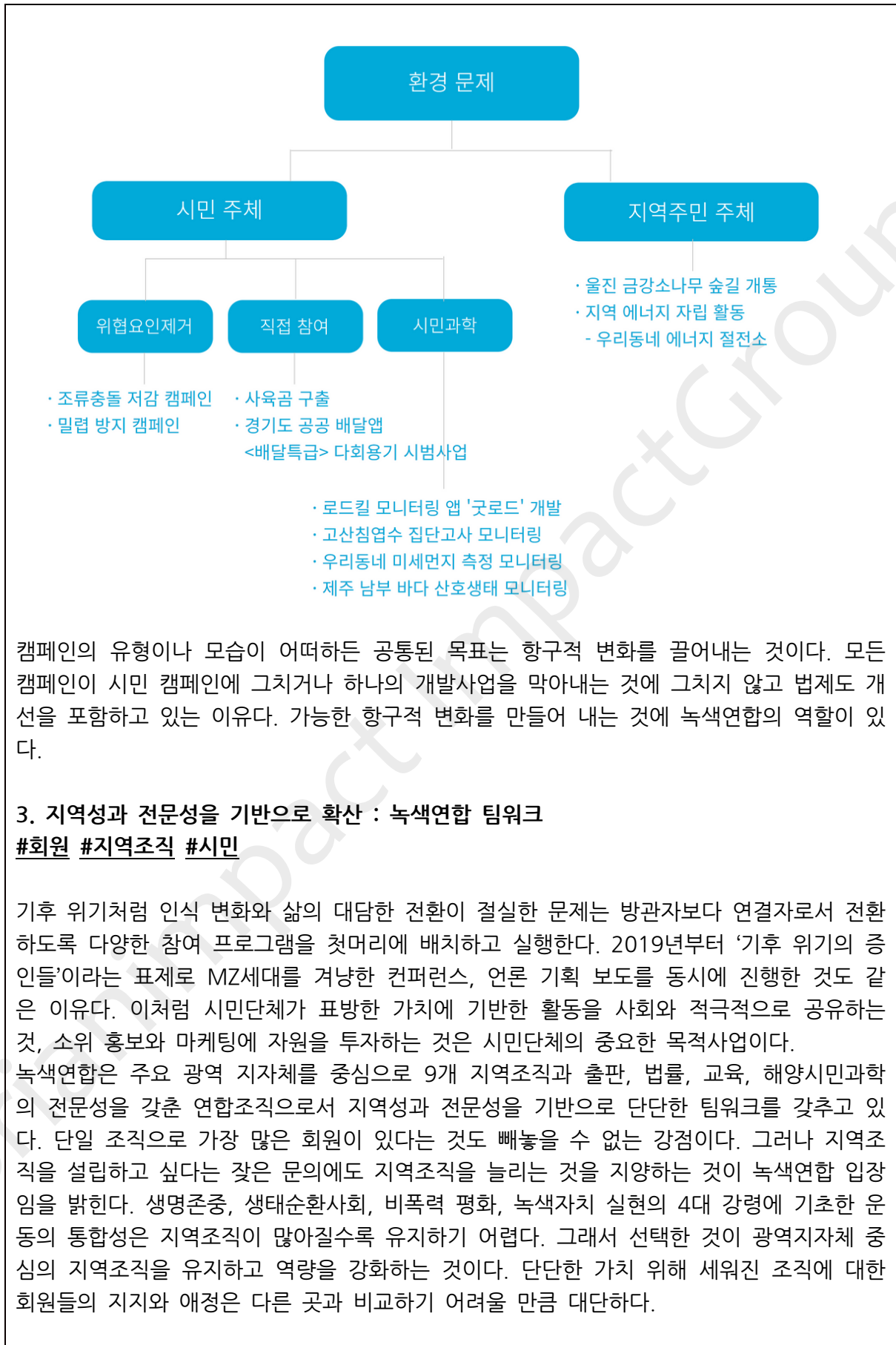
(1) 법 제도 활용을 통한 캠페인

- 법 제도의 정당성 활용 : 개발 현장이라면 법정 보호 야생동식물 서식조사, 식물상과 식생 조사 등 현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절차 안에서 언론, 입법기관(국회 등)과 함께 정책 대응을 펼친다.
- 보호제도 마련 또는 개선 : 보호 제도가 미비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현장이라면 중·장기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실행해 우리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새로운 법 제도를 구축한다.



(2) 시민과 지역주민 주체의 보호기반 마련

- 지역주민 주체의 변화 : 지역주민 주체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역주민과 단단한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주민이 보전 주체로 서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최초 예약탐방제 트레일,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이 만들어지기까지 활동가를 3 년 동안 지역으로 파견하고 마을 법인을 만들었던 것이 그 예다.
-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 녹색연합의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환경활동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확장한다. 기후 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침엽수 조사를 백패커들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바닷속 생물 종 조사 메뉴얼을 만들어 정기적인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시민과학은 앞으로 환경단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이를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곳이 현장중심 녹색연합이다.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현장성 - 현장 전문성 기반의 활동가 운동력

현장 데이터와 지역주민을 고려한 활동가 중심의 운동력이 녹색연합이 내세우는 강점이자 특별함이다. 현장에서 추적한 증거로 세운 우리 가설을 과학적 논거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연구전문가들과 협력한다. 무엇보다 과학적 논거를 우리가 대변하는 가치 위에 두지 않는다. 현장성을 중시하는 운동은 기민함을 덤으로 가질 수 있다. 현장성은 곧 지역성이기도 하다.

완결성 - 스스로 지켜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법제도 개선

환경운동의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법 제도 개선 또는 플랫폼 다변화를 통한 참여 확산 등으로 목표도 다양해진다. 녹색연합은 조직의 공동목표에 여러 활동가들이 기여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조직 운동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녹색연합은 현장 활동을 중심에 둔 29명의 활동가들이 각각의 영역별로 항구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법 제도개선까지 개별 운동의 목표로 삼는다. 운동의 완결성이 녹색연합의 강점이고 또 시민들이 녹색연합에 기대하는 바다. 물론 녹색연합도 다양한 운동의 주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차용하고 실행하는 시도를 게을리할 수 없다. 변화된 방식은 변화한 시민들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종착점은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귀결된다. 녹색연합 운동의 본질은 완결성(법 제도개선으로 항구적 변화 추동)이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강점이다.

독립성 - 감시와 견제를 통한 균형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후원은 받지 않는다.’,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는다.’, ‘회원 회비 중심의 재정구조를 유지 발전시킨다.’ 등 재정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재정 구조에 대한 자부심이 결국 재정 운영 건전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수입 중에서 회원 회비 비율이 환경단체 중 가장 (월등하게) 높다. 시민사회는 권력 감시와 견제 역할의 워치독(watch-dog)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의 독립성은 녹색연합의 역할을 규정한다. 현실적 장애와 대안 제시라는 딜레마에 빠지기보다 다른 삶에 대한 상상과 대담한 전환을 이야기한다. 물론 주장의 논거는 탄탄해야 하고 논거의 데이터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현장 중심 운동을 하는 녹색연합에겐 기본이다.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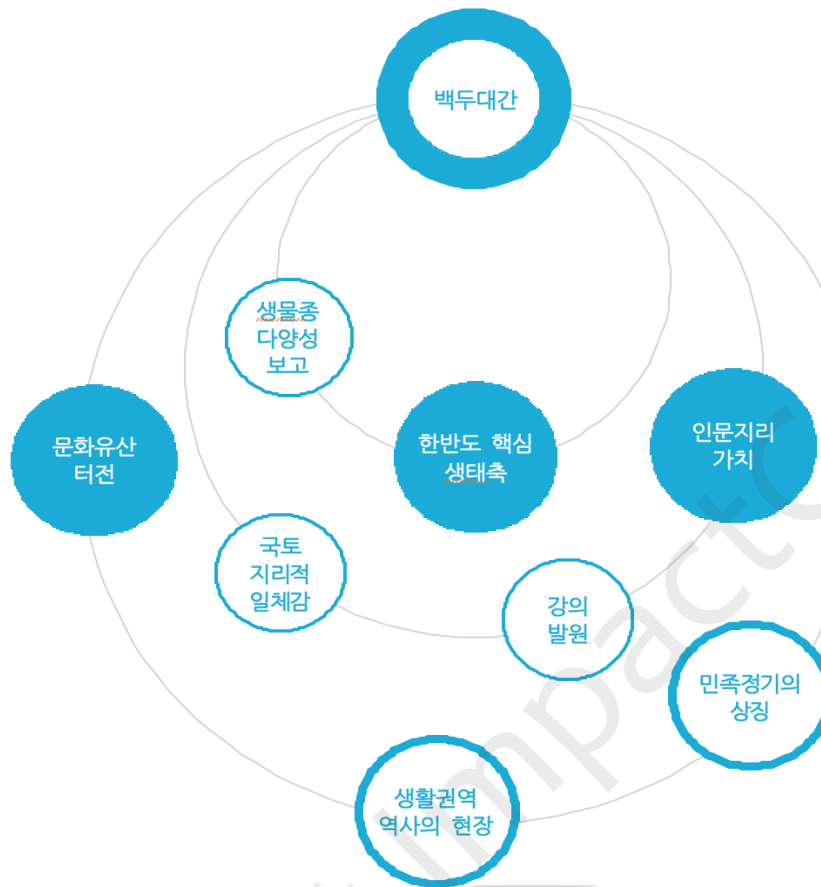
1. 법과 제도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내 최초의 백두대간 환경 대탐사로 현장 주도권 확보**
 - 1996 년, 2 년에 걸친 백두대간 환경조사 결과 무분별한 훼손을 낱알이 고발하면서 정부와 언론이 백두대간에 관심을 갖도록 이끔
 -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로, 댐, 광산, 스키장, 대규모 농경지 등으로 훼손된 백두대간의 산림파괴 30 선을 발표하고, 이는 이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됨
- **국토의 지리적 일체감 부여와 동시에 녹색연합 생태 보전활동의 일체감 시작**
 - 낙동정맥을 시작으로 백두대간에서 뻗어나간 정맥으로 조사를 확장하면서 백두대간이 곧 온 국토임을 알리고 인문 지리적 가치로 확대함
 - 정맥별 조사는 지역조직과 함께 현장성을 바탕으로 생태보전 사업 영역의 끝을 갖추는 계기가 됨
- **보호법 제정으로 훼손지 생태복원의 근거 마련**
 - 2003 년 자병산 석회석 광산의 훼손지 복원 문제로 시작된 보호법 제정논의는 오랜 노력끝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백두대간은 법에 의한 지위와 공간의 실체를 확보함
 - '이제는 생태복원이다' 심포지엄을 통해 구체적인 생태복원 정책제안을 하고, 폐 군기지 복원, 도로로 단절된 마루금 생태축 복원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짐
-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15 년 동안 지속적인 훼손 현황 고발**
 - 백두대간 종주가 등산 문화로 확산되면서 마루금 훼손도 심각해져 2001 년 전체 구간 현장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등산활동으로 축구장 75 배에 달하는 등산로에서 10 톤 트럭 1 만 3 천만대 분량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음을 발표하고, 정부에 훼손지 복원을 요구함
 - 2016 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15 년 전보다 풀한포기 없는 나지 면적은 21%가 넓어졌고, 축구장 107 개에 달하는 면적이 등산로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남
- **공간의 가치에 주목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핵심지 강조**
 - 여러 기관에 흩어진 생물다양성 정보를 모아 생태지도를 펴내고 주요 권역별로 대표하는 식물과 동물을 선정해 생물다양성의 핵심공간으로 백두대간 중요성 알림

백두대간 남한 지역의 길이는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684km에 달합니다. 마루금을 중심으로 면적 263,427ha에 대해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생태 보호구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백두대간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남북으로 긴 벨트형 보호구역이라 생물종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교차하여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임

니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식물종의 33%, 1,241종이 백두대간에 있고, 산양, 검독수리, 사향노루, 수달, 얼룩새코미꾸리, 산작약 같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39종이 발견되었습니다.



(2) 웅담채취용 곰 사육 정책 폐지 활동

• 곰 사육 문제를 세상에 알린 첫 환경단체

- 한국에서 곰 사육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재수출 목적의 곰 사육을 권장하면서 시작됨. 이후 곰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곰 수입은 1985년에 중단됐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 증식된 곰은 1,400여 마리에 달함. 곰 수출길이 막혔을 때 정부가 내놓은 농가의 손해보전 방안은 웅담 채취 합법화였음.
- 녹색연합은 2003년부터 곰사육 정책 폐지 활동을 시작함. 중국 및 국내 웅담용 곰 사육농장과 전통 약재시장, 온라인마켓 등 웅담 거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입법 활동, 대중인식 캠페인, 대체 약재 연구 등을 통해 사육곰 문제를 공론화함.
- 2005년 <사육곰 및 웅담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사육곰 및 웅담 관련 한의사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87.1%가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을 반대한다는 여론을 확인함. 또한 2007년에는 단병호 의원과 <곰 사육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육농가의 80%가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곰 사육 폐지 정책에 동의 및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함.

• 실질적 변화와 함께 이뤄낸 사육곰 산업 종식의 과정

- 시민도, 농가도 원하지 않는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해 녹색연합은 국회와

함께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등 여러 차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활동함.

-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져 2014년에는 환경부와 함께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을 진행함. 더 이상 철장안에서 사육곰이 태어나지 않게 됨
- 정부는 이대로 곰 개체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 판단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녹색연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 기금을 모아 국내 최초로 사육곰 4 마리를 철장 밖으로 구출함. 구출한 곰은 현재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녹색연합은 ‘곰과 함께’라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후원자들과 구출된 곰 보호시설을 찾아 생명존중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사육곰 문제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있음.
- 또한 곰을 불법으로 증식시키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법증식 처벌 강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해냄. 사육곰 및 반달가슴곰 보호 시설(구레) 설치 예산 편성을 이끌어 냈으며, 2022년에는 환경부, 사육곰협회, 시민단체, 지자체가 함께 <사육곰 산업 종식 선언 협약>을 함으로써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남아있는 사육곰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를 이루어 냄.

2. 시민참여형, 시민(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변화

(1) 울진 산양 보호와 금강소나무 숲길 만들기

- **민관거버넌스의 결실, 주민참여형 숲길 제 1 호**
 - 2010년 개통된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은 녹색연합과 산림청, 울진군과 지역주민이 협력한 국내 유일 예약탐방제 숲길임. 금강소나무 숲길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제 217 호 산양 서식지 보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 주민참여형 숲길 제 1 호 사례로, 지역 주민들은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무협의회에 참여해 숲길 조성작업에 직접 관여했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루 탐방객 80 명과 예약탐방제에 동의함. 금강소나무 숲길은 운영의 원칙으로 공정여행, 책임여행 등의 개념을 도입해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숲해설사로 참여해 탐방객을 안내하는 등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음.
- **지역 주민 주체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 금강소나무 숲길이 위치한 울진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양의 국내 최남단 집단 서식지로, 산양은 2019년 기준 전국에 약 1,300 마리가 남아있고, 이 가운데 120 개체 이상이 울진삼척지역에 서식함. 그러나 2010년부터 10년동안 울진삼척 지역 산양이 58 마리 폐사하는 등, 울진삼척 지역에 서식하는 산양은 밀렵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울진 산악 지형의 특성 상 지역주민 협력없이 산양보호활동은 불가능함. 실제

동절기 산양 먹이주기 활동을 하고 탈진된 산양을 신고해 직접 구조 활동을 함께 펼침. 지역주민의 정기 모니터링과 탈진·폐사 산양 발견시 주민들의 신속한 신고와 안내로 울진 지역 산양을 구조하고 있음.

- **시민과학의 모범 사례, 시민참여형 야생동물 조사**

- 녹색연합은 해마다 자원활동가로 구성된 <야생동물탐사단>을 모집해 울진·삼척 지역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음. 2011년 울진·삼척 지역의 산양 전체 서식지 조사와 흔적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산양 모니터링 및 구조 활동을 하고 있음. 2024년 1월 현재 13기까지 운영되었으며, 활동을 통해 천연기념물 217호이며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과 멸종위기종 2급인 삵과 담비를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흔적을 발견하여 울진·삼척 지역 생태계의 우수성을 확인함.

(2) 시민참여형 캠페인으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활동

- **위협요인 저감을 위한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변화**

- 녹색연합은 2019년 4월부터 투명 유리창 조류충돌 문제의 인식 확산과 실질적인 피해 저감을 위해 <새친구> 캠페인을 시작함.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새충돌 사례를 수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시민들이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통해 박새, 멧비둘기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참매와 새매 등 다양한 종류의 새충돌 사례가 발생함을 확인함
- <네이처링>을 통해 시민과학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방도 구간에 시민들과 함께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함.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2024년 1월 현재 8기까지 진행되었으며, 회당 4-50명의 참가자가 참여함
- 캠페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새친구가 스티커를 부착한 서산 649번 지방도 방음벽, 용인 함박초등학교 인근 방음벽, 제주 예래 초등학교 방음벽, 태안 몽산교차로 방음벽에는 스티커를 붙인 후 조류 사체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함. 시민과학 활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가장 좋은 사례임

- **법과 제도 변화 견인**

- 2021년 3월,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를 개정해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새충돌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이어 조류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함. 2020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충주, 2021년 광주광역시, 광주 남구와 북구, 충남 서산, 부산 남구, 경남 진주, 충남 경기, 경기 시흥, 울산, 대구 동구 등 지금까지 15개 기초, 광역 자치단체가 새충돌 저감 노력의 의지를 밝힘
- 2022년 5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어 환경부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제3장 미래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1.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원칙을 법제도로 구현하고 통용되는 상식으로 자리매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각종 난개발로 피해받는 지역주민 등 환경 현안의 중심에 ‘원인자부담원칙’을 법제도로 더욱 공공히 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으로 세워야 한다. 그 중심에 대규모 개발사업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거짓 부실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오염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작동하도록 한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민인식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문제의 원인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 2024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원인자 부담 원칙과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본래의 의미대로 기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한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2. 보호지역을 위상에 걸맞게 보호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되어 있는 환경현안을 발굴하고 당장의 편리나 무관심이 환경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린벨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새보호지역 등 난개발사업 앞에 부질없이 허물어지는 허술한 보호지역 관리 실태를 밝힌다. 국내 훼손실태와 더불어 해외 보호지역 정책 및 관리에 대한 교훈을 얻고, 육상, 습지, 해양 등에서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현재 국내 보호지역을 일관성있는 관리 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 자연이 공공재이며 인류의 유산이라는 위상 정립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회복은 중요한 과제이다. 자연환경은 개발을 통한 사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공공재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담아 일방적인 편익을 차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과 그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다. 바람, 태양, 강, 바다 등과 같이 명확한 자연의 산물뿐만 아니라 사유화 된 산림일지라도 공공재라는 의미 부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연이 공공재라는 인식, 공공재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캠페인을 국내에서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자연의 주체성(뉴질랜드의 황가누이강 사례 등)과 공공성을 우리나라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사업으로 자연의 권리, 공공재로서의 자연의 의미를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캠페인, 자연의 권리 선언문, 문화 활동, 정책담론 생산 등을 통해 각인시켜낸다. 자연이 개인의 자산, 지역의 자산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

지원금이 주로 사용될 분야와 사업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기술

1. 네트워크 활용으로 지역 현장성과 정책 전문성 연계

- 녹색법률센터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환경영향평가법, 보호지역 정책,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한 환경 법률 정합성 연구 강화
 -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과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법률 정보 제공과 교육 강화
- 생물종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야생동식물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대응 전 현장 데이터의 사전 확보
 - 시민과학자 양성과 더불어 조사 방식의 표준화
 - 기후위기, 생물종 다양성의 의미를 담은 교육키트 개발과 현장 활용

2. 운동통합성 기반의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심화

- 녹색연합이 다루고 있는 전국의 활동현장은 기후위기 또는 무분별한 개발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증거임. 이러한 기록이 국소 지역의 문제로 파편화되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오용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의 사업 의제를 발굴, 문제인식을 확장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보함
- 공통 의제와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 : 해양포럼 등을 운영하여 의제별 운동 통합성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함께 키우며 연대를 강화함. 육상, 습지, 해양 등에서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보호지역들을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시킴

3. 시민과학자 양성과 확장

-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데이터 생산 주체로 시민과학 활동 영역 확대
 - 시민과학자 양성 :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두고 지구에 해가 덜 가는 방식으로 숲과 강, 바다에서 취미를 즐기는 이들과 함께 생물종 조사, 생태계 변화 조사로 육상 및 해상에서의 활동 영역과 대상의 확대
- 현장 기반 데이터의 이해(데이터 리터러시)와 활용 역량 강화
 - 시민과학자들의 현장 조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키트 개발과 활용
 - 기록의 축적(아카이빙)을 넘어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각화 시도
 - 생물종 정보와 조사 방법 제공, 위치 정보 기반의 조사 기록 등을 담은 조사 앱 개발로 온라인에서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오픈데이터화

4. 적극적인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홍보

- 강연, 전시,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공공재인 우리 자연의 위상을 시민 삶속에서 높이고 시민의 참여 영역을 확장함
 -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
 - 그린 컨퍼런스 : 환경 이슈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의 장으로 활용
 - 퍼포먼스 기획자, 예술가 등과의 협업으로 환경문제 홍보의 다각화
 - 매체별, 대상별 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확대
- 녹색연합이 사회에 외치는 메시지가 영향력과 정부 협상력을 가지는 것은 녹색연합이 전국 회원 조직이며 녹색연합의 목소리가 곧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신뢰가 있기에 가능함. 피플파워(people power) 확대를 위해 전국 녹색연합의 회원 확대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함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금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 환경 정책 및 제도 개선 성과

- 환경영향평가협의제도 개선 : 오염자 부담원칙을 구체적으로 담고, 부실, 거짓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보호지역 제도개선 :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호지역이 공공재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담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함

● 시민 인식 전환

- 자연이 개인의 자산, 지역의 자산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환경 오염으로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을 지역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공동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
- 오염을 일으킨 당사자가 책임자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의 공감과 확산
- 당장의 편리나 무관심이 환경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시민과학 확산

- 시민과학 프로그램 개발, 정례화를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 확산
- 육상, 해양 등에서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보호지역들을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민과학을 통해 만든 데이터 활용
- 종 정보조사, 오염조사 매뉴얼 제작 및 생태조사와 교육 키트 개발 -

일상에서의 환경활동가 양성

● 전국 녹색연합 회원 증가 추이

- 주요 활동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한 온오프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 성과지표로 회원확대 증가 추이 확보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Scale-Up

● 전담 인력 배치

- 목적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시민인식개선과 지역연대를 총괄하며, 보호지역제도개선에 주력하기 위함
- 계획
 - 전담팀 구성 (그린프로젝트팀) : 팀장을 포함,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및 시민인식개선과 지역조직연대를 담당할 인력 4인 배치
 - 전담활동가 배치 :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주관하며, 보호지역 제도개선방안을 담당할 인력 1인 추가 배치.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및 지역조직과 소통하며 해양영역 운동 확장

● 전국녹색연합 회원확대

- 목적 : 녹색연합의 인지도 및 사회적 영향력 확대 및 재정독립성 안정화를 기하며, 피플파워와 위치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 지역조직 기반을 강화하여 활동의 지속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계획
 - 지역조직 회원확대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한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의 전화모금을 7개 지역 및 전문기구로 확대
 - 모금과 홍보 역량 강화를 꾀함

● 전국녹색연합 활동가 역량 강화

- 목적 : 이론과 현장을 연결시킨 교육으로 활동가 역량 및 전국녹색연합 활동가 유대감 강화
- 계획
 - 현장 감수성 교육 : 현장조사와 기록, 글쓰기
 - 리더십교육 : 고연차활동가들의 리역량강화
 - 녹색순례 : 생태적으로 민감한 현장 및 환경현안지역을 순례하며 현장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

Scale-Out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분화 및 안착

- 목적 : 제주도를 사업공간으로 하여 산호생태모니터링을 비롯 기후위기와

해양생물종 변화, 제주 연안해양 환경현안을 다루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2023 년)하고 안착시킴

○ 내용

- 시민과학 산호탐사대 정기 운영을 통한 생태계 변화 추적, 산호 서식현황과 훼손 요인 생태자료 수집
- 산호화 해양생태계 변화를기록하는 다이빙 홍보 및 활성화 시민과학 교재 개발
- 산호 분포 지도 포스터 제작을 통한 산호 서식 및 가치 알리기
- 해양보호정책 개선활동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 생물다양성 조사로 진행되는 서식지 공간 조사, 개체 조사 방식의 진화

주로 생태현장조사와 야생동물의 추적과 공간 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무인센서카메라, 드론 카메라 등은 저장매체, 탐지 각도, 탐지 거리, 렌즈, 화소, 해상도, 영상기능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객관성과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에 다양한 조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 휴대용 전자기기 위치기반서비스와 SNS 를 활용해 시민과학의 확장

비전문가인 대중들이 협업하여 집단지성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과학적 성과를 만드는 것을 지칭하는 '시민과학'은 시민들의 SNS 해시태그(예:#돌고래) 목격담으로도 생태조사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녹색연합은 <새친구> 프로젝트로 야생조류의 투명유리창 충돌 현황을 '네이처링(naturing.net)'을 통해 기록하여 공유하도록 안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이미지와 위치데이터를 수집해 전국 외래 거북 분포를 파악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한다.

■ 제4장 세부 사업계획서 (2025년)

● Scope and Approach 사업 범위와 접근 방식

● 사업의 범위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영역 범위 :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그린프로젝트팀, 자연생태팀, 이음팀, 조직팀, 홍보팀), 전문기구(녹색법률센터) 및 지역조직

■ 녹색연합 본부사무처

■ 그린프로젝트팀(주무부서) :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환경영향평가제도), 생태부하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과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자연의 권리 캠페인

● 팀 4인 활동가의 전담인력으로 진행

■ 자연생태팀 : 시민과학(기후위기 생물다양성 - 고산침엽수 조사), 육상 보호구역 법 개정안 연구,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현장활동 및 보호구역 사례 대응,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

● 해양영역 전담 인력 1인 추가 배치

■ 이음팀 : 녹색연합 회원확대캠페인 및 시민인식증진

■ 조직팀 : 활동가 역량강화 및 전국녹색연합 조직력 결속 및 확장

■ 홍보팀 : 자연의 권리 캠페인, 야생동물 강연

■ 녹색연합 전문기구

■ 녹색법률센터 : 법제도 교육 및 개정법안 연구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 해양보호구역전수조사 협력

■ 녹색연합 지역조직 : 전국녹색연합 회원확대 프로그램,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 협력

● 접근방식

1. 법제도 개선 캠페인

■ 핵심목표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문제정의와의 연관) 생태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유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였음.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올곧게 세울 필요가 있음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식) 개정법률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한 의원실과의 협력, 관계 기관 간담회, 국회 토론회, 국감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사례 의제화, 법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 조직 및 법개정 필요성 홍보활동

(목표 달성의 결과) 객관성, 알권리, 민주적 의사결정기능 강화를 담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의 개정

■ 핵심목표 2. 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마련

(문제정의와의 연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자연생태계나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각국은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보호지역 지정 취지에 다르게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한 공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보호지역의 관리에 있어서 일관성있고 통합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식) 도출된 보호지역 제도개선방안을 토대로 법개정 연구 진행, 시민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 보호구역 확대 제안, 보호구역 난개발 대응

(목표 달성의 결과) 총 6개 보호지역에 대한 법개정안 도출,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확대, 보호구역 난개발 사업 백지화

■ 핵심목표 3.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가이드 제시

(문제정의와의 연관) 환경 수용성을 초과한 자원 남용과 폐기를 막기 위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 생산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책임을 강화함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식) 탈플라스틱 이슈리포트, 탈플라스틱을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 보도자료, 토론회, 홍보활동 전개

(목표 달성의 결과)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원천 감량을 위한 목표 수립과 로드맵 필요성, 플라스틱 감축 가이드를 제시

2. 시민인식 개선

■ 핵심목표 1.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자연의 권리에 대한 담론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인식을 증진함

(문제정의와의 연관) 공공재로서의 자연의 위상을 확고히하며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확산함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방식) 퍼포먼스 및 영상콘텐츠 제작 배포, 그린컨퍼런스, 강연 프로그램 진행

(목표 달성의 결과)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 확대. 법제도 변화를 위한 시민추동력 및 조직력 확보

3. 현장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

■ 핵심목표 1.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훼손 현장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

(문제정의와의 연관)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활동에 주도적인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 녹색연합 활동의 현장 중심 활동의 골자이며 이는 환경문제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 운동의 현장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답하는 과정임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방식) 고산침엽수 시민과학 모니터링

(목표 달성의 결과) 고산침엽수 조사 참여자에 의한 생물종 다양성 및 서식지 훼손
현황 조사.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한 기후위기 적응분야 대안마련, 시민과학의 모
범 운영 사례 확장

4. 전국녹색연합 조직력 확장

■ 핵심목표 1. 전국녹색연합 회원확대

(문제정의와의 연관) 시민과 회원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의 위치독 역할
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식) 지역, 전문기구별 전화모금 실행

(목표 달성의 결과) 전화모금 잠재기부자로 인한 회비 증액, 신규 가입 유도, 데이터
관리를 통한 회원관계관리 경험 축적

■ 핵심목표 2. 전국녹색연합 활동가 역량 강화

(문제정의와의 연관) 활동가의 현장성과 기획력, 추진력 강화는 시민단체로서의 현장
에 기반한 위치독 역할 수행과 시민조직화 및 인식 증진,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식) 녹색순례, 현장감수성 교육, 리더십교육

(목표 달성의 결과) 활동가들의 현장성 및 역량 강화

● 세부 사업계획서

1. 법제도 개선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활동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평가제도가 운영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민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자가 직접 대행자에게 발주하는 구조는 평가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환경영향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을 낳고 있다. 환경영향을 평가한 자료 및 전문가 검토 의견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인 형식적 절차로 전개되는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 2023년에는 전문가 및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거짓부실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법개정안으로 다듬어 국회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협력하여 법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라는 전국조직도 결성하였고, 제도개선을 지지하는 시민서명캠페인도 진행했다. 2025년에는 국회 내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수와 서명수를 늘려 법안 발의와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자 한다.

● 기존 사업 진행 내용 및 향후 전망

2023년(1년차)	2024년(2년차)	2025년(3년차)
● 환경영향평가제도 세미나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사례현장조사 및 사례집 발행 ● 환경영향평가 영상콘텐츠 제작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방안 도출 ● 언론기고	● 환경영향평가 개정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개정법률안 입법활동 ● 환경영향평가법개정을 위한 전국연대활동 조직 및 활동 ● 시민서명 캠페인 페이지 제작, 서명 조직, 홍보활동 ● 언론 기고 및 보도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및 심사, 통과를 위한 대국회활동 ● 제도개선 대선 공약 협약 활동 ● 대시민서명 조직 지속 ● 언론기고 및 보도

● 목표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발의 및 법개정
-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주요 사업 내용

사업	세부내용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활동	● 입법추진활동 ○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한 의원실 간담회 상시 진행 ○ 법개정 전략 마련 및 설계안 설계 및 전략 마련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간담회 ● 대정부활동 ○ 대선 후보 공약화
대시민캠페인 및 조직활동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동의, 촉구하는 시민 서명 전개 ○ 캠페인 페이지 개편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시민 서명 확대 ○ 홍보활동 : 언론홍보 및 SNS
시민사회 연대 활동	● 현장사례 공유 및 답사 ● 국정감사 의제 제안 및 모니터
관계기관 간담회	●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이해관계자 미팅 및 간담회
국회토론회	● 국회의원실, 시민사회,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 추진일정

[illegible]

관계기관 간담회				□	■		■		■		
국회 토론회						□	□	■			

● 평가지표

○ 정량평가

- 법개정안 발의 및 통과 여부
- 법개정안 발의를 위해 의원실을 섭외하여 논의한 횟수
- 법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이 발의자 수
- 법개정을 위해 진행한 관계기관 미팅 횟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조직된 시민서명 수
-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가 의제화 되었는지 여부
- 환경영향평가 현장 답사 횟수
- 법안 개정 필요성 관련 언론 보도 횟수

○ 정성평가

- 국회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 오염자부담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민인식이 증진되었는가

2) 보호지역 제도 개선 활동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보호지역은 환경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환경의 건강성 유지와 회복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를 막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호지역의 확대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22 년 12 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 15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핵심 목표 역시 2030 년까지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 그러나 우선 면적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정 목적에 맞게 보호지역이 관리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지정만 하고 관리는 되지 않는 일명 “페이퍼 파크(Paper Park)”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부처별 보호지역 관리 및 방안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로 인해 보호지역이 지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으로 우리나라 보호지역 제도 분석, 해외사례와 국제사회 동향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한 제도개선 방향을 실제 법제화 하기 위한 스텝을 밟아야한다.
- 해양의 경우 현재 보호구역이 1.8%에 불과하며 30%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량적 목표가 없다. 게다가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오염 및 해양생물 피해,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생태계 변화와 해안 침식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해양보호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하고 문제점을 공론화시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2025년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 10차 OOC(Our Ocean Conference)에 대응하여 정부에 해양보호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시민에게 해양생태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 기존 사업 진행 내용 및 향후 전망

2024년(1년차)	2025년(2년차)
● 육상보호지역 제도개선 방향성 연구 ● 육상 보호지역 관리 부실 사례 조사 ● 해양보호구역 이슈페이퍼 제작 ● 해양포럼 개최 및 시민과학 활동 진행 ● 연안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 활동 ● 언론 기고 및 보도 ● 홍보 콘텐츠 제작	● 육상 보호지역 법 개정안 도출 ● 해양 보호지역 전수조사 ● 육·해상보호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 ● 제 10차 OOC 협약 대응 ● 보호구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 언론 기고 및 보도 ●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 인식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 목표

- 우리나라 육·해상 보호지역 제도개선
- 보호지역 확대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 주요 사업 내용

사업	세부내용
보호지역 제도개선 (육상)	● 육상보호지역 법 개정 연구 ○ 2024년 연구용역 결과공유회, 의견 수렴 ○ 2025년 육상보호지역 법개정 연구 및 보고서 제작 ○ 연구 대상 보호지역 (연구진 논의 후 최종 결정) ■ 자연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 보호구역 확대 및 제도개선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모니터링 및 보호구역 확대 제안서 발송 ○ 보호지역 주민 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법개정안(자연환경보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한 활동 ○ 보호구역 내 난개발(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대응 ■ 현장조사, 행정 절차 대응, 언론대응, 콘텐츠 발행,

[illegible]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	☐	☒	☒	☒	☒	☒	☒	☒			
OOC 10차 대응	☐	☒	☒								
연안관리법 개정안 입법 활동	☒	☒									

● 평가지표

○ 정량평가

(육상보호구역제도개선)

- 육상보호지역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도출 여부
- 생물다양성 및 보호구역 인식 확산 콘텐츠에 대한 조회 수 및 반응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계 기관의 보호구역 확대 검토 여부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계 기관의 제도 변화 여부
- 보호지역 난개발 사업 백지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훼손 및 난개발 사례 기사 배포 유무, 콘텐츠 조회수 추이
-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이슈 대응 변화
- 백두대간 훼손지역탐방 시민 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설문 및 후기
- 보호지역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협력 관계 구성 여부

(해양보호구역제도개선)

-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 보고서 작성 여부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보호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 추이
- 국제 컨퍼런스 사이드이벤트 진행 여부, 참가자 수
- 활동 네트워크 형성 여부
- 연안관리법 및 해역이용평가 제도개선안 도출 여부

○ 정성평가

(육상보호구역제도개선)

- 백두대간 보호법 및 관련법 개정으로 백두대간 훼손지를 복원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가
- 생물다양성 협약 및 보호지역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여론을 형성했는가

(해양보호구역제도개선)

- 정부의 실효성 있는 해양생태계보전 정책 개선, 해양 기후위기 적응 정책 수립을 이끌었는가
- 바다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대했는가

3) 자원순환제도개선 활동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인간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2022 년 OECD 세계플라스틱 전망에 따르면 '19 년 현재 연간

4.6 억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이 중 9%만 재활용되고 22%는 잘못 관리되거나 환경에 누출'되고 있으며 '누출된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생체축적 등을 통해 인간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국제사회도 플라스틱 오염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플라스틱 협약 채택 논의를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심화,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다르게 국내 플라스틱 관리 제도는 후퇴중이다. 23 년 11 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 제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제도 기간을 연장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했다. 같은 해 12 월에는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축소와 유예를 거듭하다 결국 무기한 보류되었다. 24 년 3 월에는 택배 과대포장 단속 또한 2 년 유예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지난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환경정책이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플라스틱의 전 주기 중 녹색연합은 우선 생산단계의 감축에 집중해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국내 플라스틱 생산 감축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려 한다. 더불어 후퇴한 일회용품 및 포장재 규제 정책이 정상화되도록 정책 제언 활동도 하고자 한다.

● 기존 사업 진행 내용 및 향후 전망

2023년(1년차)	2024년(2년차)	2025년(3년차)
●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전국 106 가구) ● 전자폐기물 관련 이슈리포트 발간	● 폐가전 수거함 확대 캠페인 ● 충전단자 규격을 통일하는 법률 개정 활동 ● 언론 기고 및 보도	● 일회용품 및 포장재 규제강화 정책 정상화 ●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가이드 제시 ● 법개정안 마련

● 목표

- 일회용품 및 포장재 규제 강화정책 재수립
- 폐기물과 플라스틱 생산 원천 감량 목표 및 정책 수립

● 주요 사업 내용

사업	세부내용
일회용품 포장재 규제 정상화	●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활동

탈플라스틱 이슈페이퍼 발행	● 탈플라스틱 이슈페이퍼 발행 ○ 탈플라스틱 정책 수립과 정부 로드맵 필요성 ○ 국내동향 정리 ○ 국제동향 (각국의 플라스틱 정책) 정리 ○ 플라스틱 감축 기준 및 가이드 제시
플라스틱 감축 시나리오 마련 촉구활동	● 플라스틱 감축 목표 및 로드맵 마련 촉구 ○ 보도자료 배포 ○ 국회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홍보물 제작 ○ 언론기고 ● 탈플라스틱 법개정안 마련 ○ 법개정안 마련 및 제시 ○ 보도자료 배포 ● 플라스틱 국제협약 연대활동 ○ 2025 INC-5.2 추가 협상회의 대응활동

● 추진일정

□ 기획 ■ 실행											
세부사업명	2	3	4	5	6	7	8	9	10	11	12
일회용품 정책 정상화	■	■	■	■	■	■	■	■	■	■	
탈플라스틱 이슈페이퍼	□	■	■								
탈플라스틱 법개정안 마련				□	□	■	■	■	■		

● 평가지표

○ 정량평가

- 일회용품 정책 정상화를 위한 입장, 정책제언 횟수
- 탈플라스틱 이슈페이퍼가 제작 여부
- 탈플라스틱 법개정안이 마련 여부

○ 정성평가

- 일회용품 및 포장재 관련 정책이 강화, 정상화되고 있는가
- 탈플라스틱 법개정안으로 제도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는가

2. 시민인식 개선

1) 자연의 권리 캠페인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왕가누이강을 생태 법인으로 지정해 법인격을 부여한 뉴질랜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켜 향후 일어날 개발 사업에 대해 자연이 지켜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에콰도르 등,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법 체계에 반영하는 국가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지구권리장전'이 채택되도록 국제사회의 여러 ngo도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자연이 가진 공공재로서의 위상 정립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추세인 것이다.
-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이 가진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어야함에도 여전히 자연의 주체성과 공공성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며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을뿐, 아직 야생동물과 그들이 사는 삶터인 자연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민간에서는 멸종위기에 놓인 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 등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견고하다.
- 권리의 대상이 확장될 때, 그 논의의 단초는 늘 시민이었다. 녹색연합은 우리 사회의 인간중심적인 문화, 법체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향후 우리 법 체계에 자연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녹색연합의 자연의 권리 캠페인은 시민에게 자연의 권리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자료를 축적하고,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 기존 사업 진행 내용 및 향후 전망

2023년(1년차)	2024년(2년차)	2025년(3년차)
● 자연, 개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알아보는 여론조사 ● 그린컨퍼런스 : 야생과 지구법학 담론을 공유하는 강연 ● 지구권리 선언문 작성	● 그린컨퍼런스: 자연의 권리, 지구법학 담론을 공유하는 강연 ● 지구권리 선언문 작성 ● 자연의 권리 퍼포먼스 ● 자연의 권리 다큐멘터리 ● 대중강연 <동물권, 동물법 - 공존이 가능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법> 강연	● 그린컨퍼런스: 자연의 권리의 세계적 흐름을 공유하는 강연 ● 자연의 권리 2 차 퍼포먼스 ● 자연의 권리 다큐멘터리 완성 ● 대중강연 <동물권 너머> 시리즈 강연

● 목표

-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자연의 권리에 대한 담론을 공유하고, 자연의 권리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

● 주요 사업 내용

사업	세부내용
그린컨퍼런스	● 그린컨퍼런스는 2011년 처음 시작된 녹색연합의 대중강연 행사로, 생물다양성, 기후위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이슈와 강연자와 함께 해왔음. 자연의 권리, 야생을 주제로 하는 유일한 대규모 컨퍼런스로,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을 진행하는 3년동안 자연의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그린컨퍼런스를 진행함 ● 진행 일정 ○ 기획 및 섭외 : 3-6월 ○ 행사 준비 : 7-10월 ○ 컨퍼런스 진행 : 10월 중 ● 내용 ○ 자연의 권리, 지구법학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인식 ● 3차년도 그린컨퍼런스의 특징 ○ 1차년도 그린컨퍼런스는 야생을 주제로 처음 진행하는 컨퍼런스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룸. ○ 2차년도 그린컨퍼런스는 야생에서 더 나아가 '자연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강연을 진행하였음. ○ 3차년도 그린컨퍼런스는 2차년도에 뉴질랜드 원주민의 왕가누이 생태법인 관련 강연을 진행했던 것처럼 다양한 나라의 '자연의 권리' 사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로 기획할 계획임.
퍼포먼스	● 2024년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디렉터 출신 무용 안무가, 전문 무용수와 일반시민, 활동가 30여명이 서울 도심 내 게릴라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자연의 권리를 알리고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함. 2025년도에도 같은 안무가, 무용수와 함께 보다 큰 규모로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도심 내 야생동물이 한 공간을 점유하고 '자연의 권리'를 알리는 행위를 진행할 계획임. ● 방식 ○ 전문 안무가, 무용수와 협력하여 완성도 있는 퍼포먼스 진행 ○ 퍼포먼스 영상촬영·제작 및 홍보 ● 진행일정 ○ 기획 : 2-4월 ○ 퍼포먼스 : 5월 22일 예정 ○ 영상 홍보 : 6월 중순 예정

자연의 권리 다큐멘터리 제작	● ‘자연의 권리’를 통해 바라보는 인간과 자연의 연결성을 드러내는 다큐를 제작함. 뉴질랜드 왕가누이 강의 생태법인 이야기, 제주도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이야기와 더불어 지구법학자, 생태전문가 등 자연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제작할 계획임 ● 향후 환경 영화 관련 공모전에 출품하여 확산 ● 진행 일정 : 연중 (촬영 및 편집) ○ 뉴질랜드 촬영 : 3~4 월 중 방문 ○ 한국 촬영 : 5~9 월 촬영 ○ 편집 : 9~12 월
야생동물 강연	● 대중강연 <동물권 너머>를 포럼의 형태로 진행 ● 대상: 동물, 동물권에 관심 있는 시민 100 명 ● 내용: 2024 년 <동물권, 동물법> 대중강연의 연장선에서 기획.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넘어, ‘동물권’이라는 개념 너머를 상상하며,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짐. 이를 통해 자연의 권리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예술가와도 협업 예정임 ● 진행 일정(가안) ○ 세부기획 : 2~3 월 ○ 진행: 5 월, 8 월, 11 월 / 3 회 이상 진행

● 추진일정

□ 기획 ■ 실행											
세부사업명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린컨퍼런스			□	□	□	□	■	■	■		
퍼포먼스	□	□	□	■	■						
자연의권리 다큐멘터리	■	■	■	■	■	■	■	■	■	■	■
야생동물 강연	□	□	□	■	□	□	■	□	□	■	

● 평가지표

○ 정량평가

- 그린컨퍼런스에서 200 명 이상의 시민참가자에게 자연의 권리 관련 강연을 진행하였는가
- 예술가들과 함께 자연의 권리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는가
-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제작하였는가
- 대중강연을 3 회 이상 진행하여 동물에 관심 있는 시민 100 명을 만났는가

○ 정성평가

- 참가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법 체계에 자연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 자연의 가치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는가
- 서울도심 내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연의 권리 인식확산에 기여하였는가
- 다큐멘터를 제작하여 다양한 공모전 출품을 계획하고, 시민들과의 접점을 확보하였는가
- 대중강연을 통해 동물에 관심 있는 시민과 자연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었는가

3. 현장에 기반한 데이터수집

1) 기후위기 생물다양성_시민과학_고산침엽수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고산침엽수의 고사, 더 잦아진 산불과 산사태 등 녹색연합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림 생태계의 변화와 기후재난 양상을 선제적으로 관찰, 기록하고 문제를 알려왔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널리 알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조사에 참여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은 환경문제의 해결 주체가 시민임을 알리는 과정이었다.
 - 2024 년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으로 시민과학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다. 2025년에는 이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현장 조사와 시민 교육을 진행한다.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조사한 기록을 체계화해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기존 사업 진행 내용 및 향후 전망

2023년(1년차)	2024년(2년차)	2025년(3년차)
● 고산침엽수 고사 현장 모니터링 ● 고산침엽수 시민과학 교육자료 개발	● 고산침엽수 현장 모니터링 ● 고산침엽수 시민과학 프로그램 운영	● 고산침엽수 시민과학 프로그램 운영 ● 기후위기 고산침엽수 고사 시민교육

침엽수기록단			☐	☒		☐	☒				
씨드뱅크						☐	☐	☒			

● 평가지표

○ 정량평가

- 모니터링 이슈페이퍼 발간 여부
- 시민과학/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참여자 수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고산침엽수 고사 현상 사진, 영상 자료 확보 여부
- 고산침엽수 고사 관련 언론보도 횟수
-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정책 개선 계획 수립 유무
- 시민과학 데이터 확대 추이, 참가자 인터뷰, 사후 설문조사

○ 정성평가

-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 절차와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시민과학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확대되었는가
-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재난 문제를 알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으로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4. 녹색연합 조직력 확장

1) 독립성 강화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사회 대전환을 앞둔 시기, 녹색연합은 정부 정책의 변화를 견인하는 시민사회 조직으로, 운동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함.
- 녹색연합이 사회에 외치는 메시지가 영향력과 정부 협상력을 갖는 것은 전국 회원 조직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신뢰가 있기에 가능함.
- 피플파워(people power) 확대를 위해 전국 녹색연합 회원 규모의 확장이 필요함. 이를 기반으로 녹색연합은 위치독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개선과 시민 인식증진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또한 외압에도 굴하지않고 활동을 개진할 수 있음.

● 기존 사업 진행 내용 및 향후 전망

2023년(1년차)	2024년(2년차)	2025년(3년차)
● 각 조직별 회원확대를 위한 자원, 조건 조사 ● 지구의날-환경의날	● 각 조직 특성에 맞는 회원확대 프로그램, 교육 진행	● 전화모금 확대 실행 ● 온라인 참여 확장을 위한 기획과 실행의

공동캠페인(회원가입 요청 광고) ● 인천녹색연합 전화모금		● 전국녹색연합 공동브랜딩 광고 ● 대전충남녹색연합 전화모금		실제	
---------------------------------------	--	--	--	----	--

● 목표

○ 각 조직 특성에 맞춰 회원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온라인 참여 확장을 위한 교육 컨설팅으로 실제 콘텐츠 기획과 실행

● 주요 사업 내용

사업	세부내용
전국녹색연합 조직 별 회원확대	● 2023~2024 년 2 개 조직에 시범 실행한 전화모금 결과를 기반으로 전화모금 확대 실행 ○ 조직별 잠재후원자 특성에 맞는 모금 명분 기획 ○ 전화모금 실행 ○ 회원관계관리 방안 점검과 정리 ● 신규 잠재후원자 모집과 관계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민참여 교육과 그룹 컨설팅 실행 ○ SNS 채널 별 운영 방식 및 콘텐츠 개선 점검 ○ 정량적/정성적 성과 지표 점검 ○ 관심과 참여증대를 위한 기획 콘텐츠 준비, 광고 실행, 성과 관리의 실제 ○ 잠재후원자 관리와 회원 생애주기에 따른 유지 관리 프로그램 점검 ● 일정 ○ 1-2 월 중 각 조직별 협의를 통해 일정 기획 ○ 연중 진행
회원가입서 제작	● 2024 년 본부 회원가입서&안내서 디자인을 템플릿으로 제작 활용하여 전국 녹색연합의 디자인 완결성을 피하고 효과적인 브랜딩과 회원가입 요청 도구로 활용함 일정 ○ 2 월~3 월 : 각 조직별 내용 취합, 제작완료

● 추진일정

□ 기획 ■ 실행											
세부사업명	2	3	4	5	6	7	8	9	10	11	12

모금프로그램	□	■	■	■	■	■	■	■	■	■	
온라인 교육 컨설팅	□	□	■	■	■	■	■	■			
회원가입서 제작	■	■									

● 평가지표

○ 정량평가

- 전화모금 잠재기부자의 20%가 회비 증액, 7%가 신규가입에 기여했는가.
-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한 조직이 기획 콘텐츠 실행으로 목표한 잠재기부자를 확보했는가.
- 전국 공동 회원가입서를 활용해 회원가입이 발생했는가.

○ 정성평가(인터뷰로 확인하기)

- 각 조직별로 진행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회원확대, 잠재기부자 확대를 이끌었는가.
- 각 조직별 회원 담당자가 전화모금 기획 역량, 데이터 관리와 회원관계관리 경험이 축적되었는가

2) 활동가 역량 강화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녹색연합은 현장을 기반으로 한 활동가 중심의 운동 조직으로, 활동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운동을 위하여 활동가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조직 내외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중 특히 현장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녹색연합은 다양한 환경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현장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서로의 활동에 대한 공유나 이해가 부족할 때도 있음. 이는 자칫 자신의 활동에 매몰되거나, 고립감 등을 유발, 개인 활동가 또는 각 조직의 활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전국녹색연합 활동가들이 함께 동일한 현장 공간에서 녹색연합이라는 구성원으로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만으로 활동의 원동력이 됨. 또한 공통의 현장교육을 통해 서로 정보/의견 교환 등으로 각자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나누고 협업/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 기존 사업 진행 내용 및 향후 전망

2023년(1년차)	2024년(2년차)	2025년(3년차)
●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 ● 제 23 회 녹색순례	● 현장감수성 교육 ● 제 24 회 녹색순례	● 현장감수성 교육 ● 리더십 교육 ● 제 25 회 녹색순례

● 목표

- 이론과 현장을 연결시킨 교육으로 활동가 역량 강화
- 활동가들의 시민단체활동가로서 자기 리더십 강화
- 전국녹색연합 활동가 유대감 형성과 협업/연대 가능성 모색

● 주요 사업 내용

사업	세부내용
현장감수성 교육	● 대상 : 전국녹색연합 활동가 ● 사전교육 ○ 현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외부로 잘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전 교육 진행 ○ 3 월_현장 발굴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해 ○ 4 월_현장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언론활용방법 ○ 5 월_현장과제 국회입법활동으로 적용 ● 현장교육 ○ 사전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을 사진,글,영상 등 다양한 수단으로 기록하고 이해당사자를 섭외, 인터뷰하여 보도자료, 논평, 성명, 기고문 등 현장상황을 알릴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작성 ○ 작성한 내용을 형식에 맞추어 홈페이지/SNS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진행 ○ 현장대응으로 확인한 내용을 국회 입법활동으로 적용방법 모색 ○ 5 월_설악산 또는 전국신규공황대응 활동 현장(가안) 2 박 3 일 진행
리더십 교육	● 대상 : 전국녹색연합 활동가 ○ 녹색연합 리더십, 문화 및 에 대한 진단진행 ○ 진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리더십 교육 진행
녹색순례	● 대상 : 전국녹색연합 활동가 / 대표 / 회원 ● 1998 년부터 시작한 녹색순례는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파괴 현장 순례를 통하여 활동가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순례지역의 문제를 전국적 여론화하고 해당지역민과의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 매년 전국녹색연합 활동가 중 5~7 인을 한시적으로 녹색순례 기획단으로 구성하여 약 4 개월간 사업 기획/준비/실행함으로써 사업 실행 능력 향상 ○ 1 월_녹색순례 기획단 구성 ○ 2~4 월_기획 및 준비

- 2~3 월_참가자 모집
- 4~5 월_녹색순례 진행(약 10 일)
 - 비폭력 녹색정치 순례
 - 보도자료 배포
 - 퍼포먼스 진행
 - 영상 제작

● 추진일정

□ 기획 ■ 실행											
세부사업명	2	3	4	5	6	7	8	9	10	11	12
현장감수성 교육	■	■	■	■							
리더십교육	■	■						■			
녹색순례	■	■	■	■							

● 평가지표

○ 정량평가

- 계획 대로 교육이 진행되었는가
- 각 프로그램별 결과물이 제작되었는가
- 각 프로그램별 참석자 수

○ 정성평가

- 현장에 대한 활동가들의 이해가 높아졌는가
- 활동가 역량 및 리더십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가
- 녹색연합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높아졌는가

● Risk Mitigation 리스크 방지

Risk 1 : 전국단위의 다양한 활동 기금으로 쓰이면서 완결성있는 주요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움

- 대안 1 : 실무 책임자인 사무처장을 임팩트 그라운드 전체 사업의 PM 으로 두고, 전국 녹색연합의 조정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또한 핵심 활동 수행과 성과관리를 위한 전담팀으로 ‘그린프로젝트팀’ 을 설치하여 정책변화, 시민참여, 연대협력을 총괄할 수 있도록 10 년차 이상의 팀장급 활동가 3 인을 비롯 활동가 4 인을 배치함. 다양한 환경이슈에 연결된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현장-정책-시민의 연결의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제안한 사업의 목표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프레임워크 관리는 물론 부서별, 본부-전문기구-지역조직의 조직별 협력을 제안하고 조정하고 있음
- 대안 2 :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3 년 중장기 목표와 의미있는 사회변화로 임팩트 기준을 수립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성과 지표를 설정함.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 범위와 별개로 상반기 평가, 연말 평가과정을 통해 목표, 임팩트 달성 범위를 지표를 통해 점검하고, 조정할 예정임. 불특정 다수가 수혜이며, 단기간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환경분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조정-평가의 선순환 과정에서 결과물보다 성과와 사회적 변화로의 운동 방식의 전환과 활동가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함

Risk 2 : 제안된 시민과학 확대와 기존 녹색연합 현장 활동의 차별성 여부

- 대안 1 : 최근 생태환경 분야의 시민참여형 활동은 생태환경위기와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접목해 시민과학 필요성을 다양한 기관과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과거 시민참여 활동이 참여자 교육과 현장 감수성 확대의 목적이 컸다면 앞으로의 녹색연합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시민 기록과 감시를 통한 사회 변화’에 중점이 되도록 시민조사용 교육자료, 조사기록 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 아카이빙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를 꾀하고 있음
- 대안 2 : 고산침엽수, 산호 같은 특정 종 조사 중심의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호’의 공동의 목적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정책 제안과 백두대간, 해양보호구역 같은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간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는 시민 캠페인을 시도할 예정임

Risk 3 : 스케일 아웃으로 제주 거점의 해양시민과학센터 설립 이후 안착 실패

- 대안 1 : 전국단위 해양생태분야 포럼에 해양전문기구로서 함께 하며 본부 자연생태팀의 해양보호구역제도개선 의제와 더불어 전국녹색연합의 해양 관련

시민과학 프로그램, 주요 해양 생태 대응 의제 등을 공유하고 있음. 향후 녹색연합 공동 과제 등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라는 공간의 범위를 넘어서 해양생태분야 전문 NGO로 정체성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 확대하고 있음.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설립 이후 안정적으로 안착하며 조직력을 확대하고 있음.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마련하였다고 평가함

Risk 4.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활동의 성과가 연결되고 지속되기 어려움

-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사업의 많은 부분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쓰였고, 사회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음. 당위적 주장을 넘어 변화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가시화 한것은 향후 녹색연합 활동의 성과와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임팩트 측정

1) Primary Outcomes

지원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변화를 정의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은 무엇인가요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자원순환제도 개선을 통한 폐기물 감량
-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의 확대 및 보호 관리 체계 마련
- 에너지전환시나리오의 지역별 적용
- 시민과학 영역의 확장
- 자연의 권리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을 통한 시민인식 확산
- 해양시민과학센터의 안착
- 회원 규모의 확장을 통한 운동의 독립성 강화와 녹색연합의 사회적 영향력 확장

2) Outputs

본 사업이 성공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어떤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임팩트 측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작성해 주세요.

연번	측정지표명	측정방법	성공을 위한 목표치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법개정안 발의를 위한 의원실 설명회, 섭외, 관계기관 미팅 횟수 • 대선공약협약 참여 정당 수 • 법개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 수 • 법개정안 촉구 시민서명 수 • 국정감사 의제화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 개정안 발의 서명 의원 100명 이상 • 대선공약 협약 참여 5개 정당이상

		• 제도개선 필요성을 다룬 언론보도 횟수	• 개정 촉구 시민서명 3 만명 • 국정감사 질의 2 회 이상 • 언론보도횟수 10 회
2	보호구역 제도 개선	• 보호지역 관련 법개정안 법개정안 마련 여부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주민환경감시원제도의 법적근거 확보 여부 • 백두대간보호법 20 주년 보고서 발간 여부 • 보호지역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전문가 협력관계 구성 및 참여 • 생물다양성과 보호구역 인식 확산 콘텐츠 조회수 •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 보고서 작성 여부 • 연안관리법 및 해역이용평가제도개선안 도출여부	• 보호지역법개정안제시 • 연구보고서 발표 보도 10 회 • 난개발 및 훼손실태 언론보도 70 회 • SNS 콘텐츠 조회수 3 만회 •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인터뷰 10 회 이상 • 해양컨퍼런스 사이드이벤트 진행
3	자원순환제도 개선	• 일회용품 및 포장재 규제 강화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제언 횟수 •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이슈페이퍼 발행 여부 •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법개정안 마련 여부	• 1 회용품 감축을 위한 정책 실행 • 플라스틱 생산감축 가이드 마련 • SNS 콘텐츠 조회수 3 만회 • 언론보도횟수 10 회
4	자연의 권리 인식 개선	• 그린컨퍼런스 참가자 수 • 퍼포먼스 진행 여부 및 콘텐츠 조회수 • 영상콘텐츠(다큐멘터리) 제작 여부 • 영상콘텐츠(다큐멘터리) 공모전 출품 여부 • 야생동물강연 참가자 수	• 그린컨퍼런스 300 명 이상 참가 • 퍼포먼스 콘텐츠 조회수 5 만 • 다큐멘터리 제작 및 공모전 출품 • 야생동물강연 100 명 이상 참가
5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악화 모니터링 6 회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이슈페이퍼 작성 • 시민참여 프로그램 <침엽수 기록단> 2 회 • 시민과학 프로그램 <씨드뱅크(가제)> 1 회	• 모니터링 이슈페이퍼 발간 • 시민참여 참여자 100 명, 시민과학 35 인 • 언론보도 20 회 이상
6	전국녹색연합 조직력 확대	• 7 개 녹색연합 지역 및 전문기구의 전화모금 결과 • 잠재기부자 확보 • 회원가입서를 활용한 회원가입수	• 잠재기부자의 20% 회비증액, 7% 신규가입

■ 제5장 미래비전을 위한 여정맵

● 여정맵

제5장은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후, 재단 사무국과 함께 작성합니다.

조직의 미래비전

● 빨강 - 중단, 계획변경
● 노랑 - 해야 하는 것
● 초록 - 하고 있는 것 (진행중)
● 파랑 - 완료된 것

- 1. 삭막한 우리 사회의 허파가 되는 조직, 녹색연합**
 - 4대 강령 (생명존중, 녹색 가치, 비폭력 평화, 생태순환형 사회), 생태철학 제시자,
 - 삭막한 시민, 기후의 허파
 -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
 - 시민과 함께 그리고 독립성 강화, 독립된 재정, 독립된 활동 (후원회원 1만명, 상근활동가 40명)
 - 현장 중심 전문가의 아이콘, 진정한 시민과의 소통 단체
 - '현장성', 현장에 답이 있다!
- 2. 녹색연합 조직내부 체계 확립**
 - 워라밸, 새로운 우리 집
 - 서울근로자 평균 연봉보다 딱 23%만 더, 든든한 급여 (더 많은 이들이 활동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 녹색 연합의 씽크탱크
 - 혁신적인 시민단체 되기(근무형태, 방식 등) ➡ 필요하지만 더 좋은 방법을 고민 중!
 - 조직적인 현장 해결사, '환경문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사
 - 직업으로의 환경운동(전문성 & 직업적 안정성)

[외부의견]

- 현장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환경 단체, 활동가 중심·현장 중심의 녹색연합 문화가
- 다른 사회조직 및 글로벌로 확산되는 것
- 시민들과 함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조직
- 환경문제에 관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체불가능한 시민단체
- 생명과 자연의 있는 그대로를 지켜내는(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장 믿을 만한 조직
- 생명권(생명존중)이 실현되는 세상,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공동체
-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 환경보호와 생태적 접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 기후행동 권고를 넘어서 책임·의무·필수인 사회(우선순위 확보)

녹색연합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녹색연합

우리 모두의 녹색연합

생태축 보호에 기반한 서식지 운동

작은 생명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세 세상을 만들어가는 단체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단체

기후와 생물다양성을 키워드로 활동하는 시민환경단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는 녹색연합

독립된 재정, 독립된 활동을 하는 환경시민 운동단체

브라이언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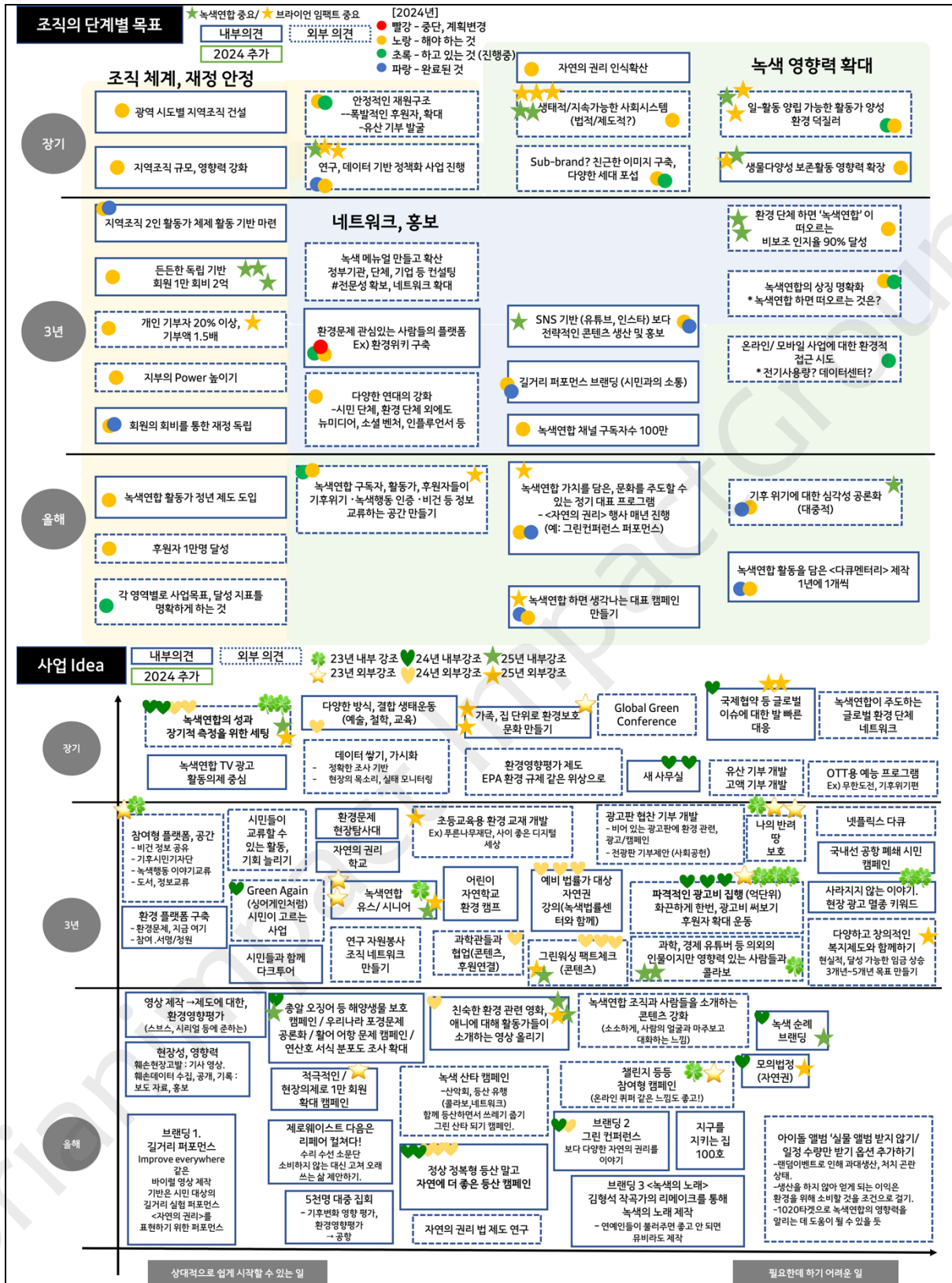
깨끗한 세상을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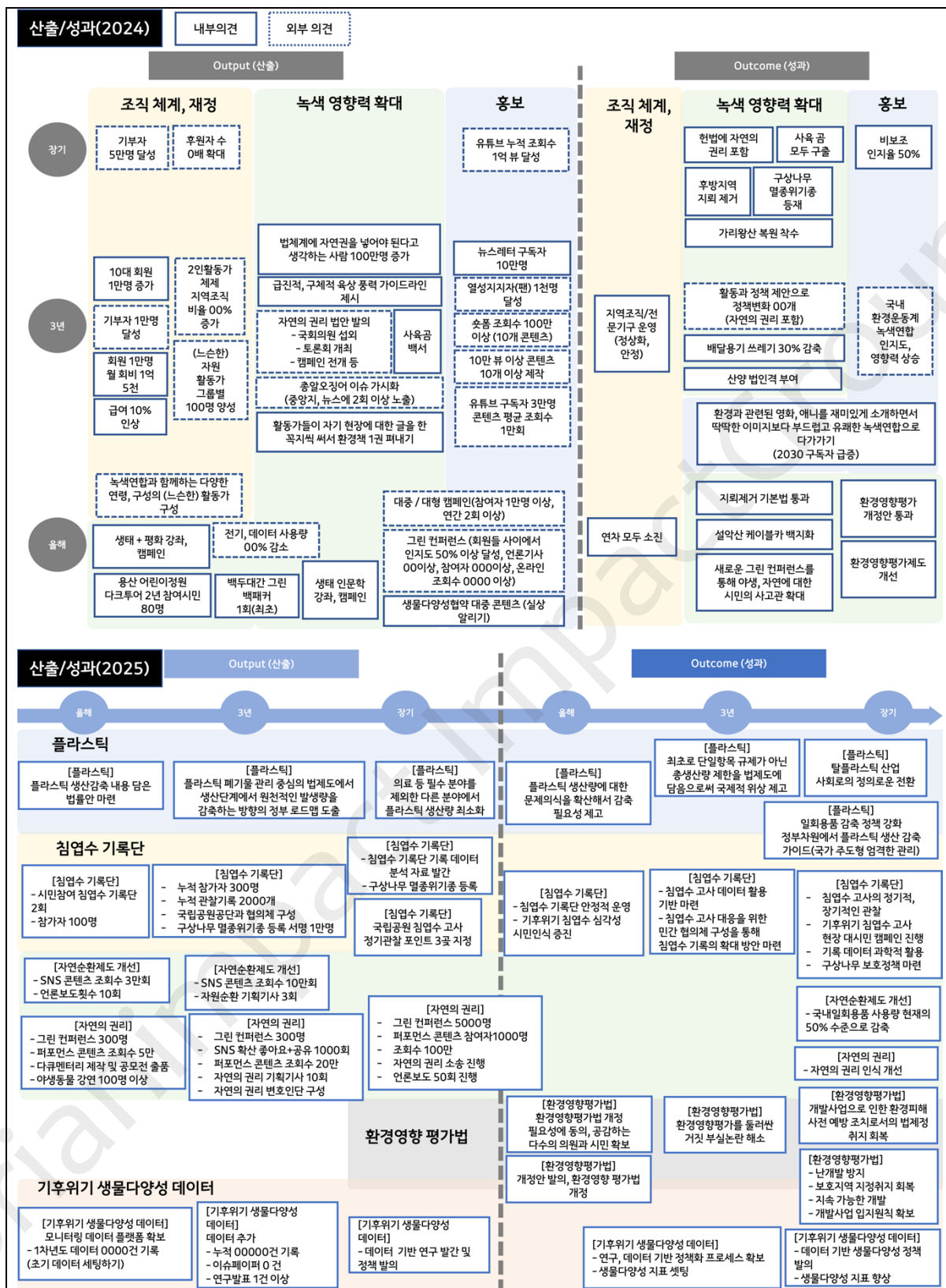
오래도록 생명과 녹색의 가치를 지켜가는 단체

우리나라 자연 현장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고 보호하며 지키는 단체

녹, 색지구와 활동을 위한 색, 다른 접근과 다채로운 연, 대의 실험 공간이자 '합'의 공동체!

우리나라 자연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중심의 시민단체





■ 필수 확인사항 및 지원사업 동의

아래 '필수 확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확인>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필수 확인 사항	확인
1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서류는 심사 및 관리를 위해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2	본 사업의 결과물과 사업을 통해 얻은 지식 및 기술은 공익을 위해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기술, 자료,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타 혁신 및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
3	본 사업의 임팩트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임팩트 측정 결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부에 공개합니다.	✓
4	본 조직은 우리의 문제해결 프레임워크가 모델링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
5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결과를 외부에 공개합니다. [외부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받은 기부금에서 책정합니다. (단, 연간 1억원 미만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회계감사인]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하되, 필요 시 재단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6	본 조직은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 시, 재단의 요구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
7	본 조직은 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본 조직 참여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조직 관계자의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지원 사업 종료 후, 1년	✓

본 조직 사단법인 녹색연합 (대표자: 우경선)는 사업계획서 제출 전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 1. 17

사단법인 녹색연합

